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동물복지
공약 자료집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2026. 5. 6. ~ 5. 27.

▶ 조사 대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개혁신당, 정의당 5개 당)

▶ 조사 방법

이메일을 통한 서면 질의 (최초 발송일: 2026. 5. 6.)

▶ 질의 내용

동물자유연대는 다음 영역에 대한 후보자의 공약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질의하였습니다.

1. 동물학대 예방 및 피학대동물 보호체계 강화
2. 유실·유기동물 발생 저감과 동물보호센터 복지 개선
3. 동물원·수족관 등 전시시설 내 동물복지 강화
4. 농장동물 복지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 전환
5. 동물복지 전담조직·예산·시민참여 거버넌스
6. 그밖의 지역별 현황 질의

* 본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은 동물자유연대의 질의서에 회신한 후보자 답변,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그리고 자체조사(언론보도 등)한 후보자들의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별 후보자 동물 복지 공약 현황

1. 서울특별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1. 동물학대 예방 및 피학대동물 보호체계 강화

- 2027년까지 동물복지·의료·응급대응 기준 서울형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2. 유실·유기동물 발생 저감과 동물보호센터 복지 개선

- 4개 센터를 거점센터로 전환 및 2028년까지 1개소 추가(5대 권역 구축)

- 24시간 구조단 운영 및 연 6천 마리 규모 25개 자치구 센터 지정

- 들개 포획관리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 온·오프라인 플랫폼 기반 행정통합지원체계(신고~인도) 마련 및 자치구별 입양센터 확충

- 유기동물 등록 관리를 위한 내장형 장치

- 자치구별 유기·유실동물 입양센터 확충 및 입양 처리 표준 매뉴얼 개발 보급

- 유기·유실 동물과 은퇴사육견 입양 가정에 입양지원금 바우처 최대 25만 원 지급 및 '첫만남패키지(사료, 이동장, 밥그릇 등)' 지급

- 분실 및 훼손 우려 없는 내장형 칩으로 일원화

- 출산·입양부터 사망 후 말소까지 생애 전 과정 등록관리 강화

3. 동물원·수족관 등 전시시설 내 동물복지 강화

- 국제 수준 복지 기준 보장 및 체험형 프로그램 단계적 개선

- 2028년 허가 유예 종료 대비 전수조사 후 부적합 시설 폐쇄 등 대책 마련(5개소 114마리 잔여 개체 인계 협의)

- 공영동물원을 구조·보호·교육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재난 대비 광역 구조체계 구축

4. 농장동물 복지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 전환

(공약 없음)

5. 동물복지 전담조직·예산·시민참여 거버넌스

- 자치구별 동물민원 전담인력 지정, 정기 직무교육 및 매뉴얼 보급을 통한 전문 대응체계 구축

- 동물복지위원회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을 실효성 있는 실질적 거버넌스 기구로 재편

6. 도심 길고양이 공존 정책과 TNR의 질 관리

- 서식현황 파악 및 25개 자치구 TNR(포획·수술·접종·방사) 추진 지속

- 돌봄 갈등 해소용 시민 교육 및 홍보물 배포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1. 서울동물복지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 의료체계 구축

2. 중앙정부와 함께 수의진료 표준수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3. 경의선숲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추진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1. 공공 반려동물 장묘 인프라 조성 및 펫로스 증후군 치유 지원

- 합리적 비용의 장례 서비스 제공

- 펫로스 증후군 극복을 위한 반려가정의 심리상담 등 치유 지원

2.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 보호시설 내 행동교정과 입양 전 적응교육 실시 및 찾아가는 반려교육 확대

- 입양 전·후 보호자 대상 파양예방 상담교육 등 책임 양육 지원 강화

- 동물보호의날 행사 접근성 제고: 펫티켓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참여형 행사로 확대 및 내실화

3. 25개 자치구에 실내외 놀이터와 공공 펫 위탁소 등 반려동물 인프라 확충

- 반려견 공공 실내외 놀이터를 25개 자치구로 확대 설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동물공약 자료집

- 25개 자치구에 반려동물 긴급·일반 위탁보호를 위한 공공 펫케어 센터 확충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 음수대 하단에 반려동물 전용 음수대 설치
- 4. 반려동물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사료 성분 및 안전성 검사 실시
 - 서울형 반려동물 안전식품 인증제 도입
 - 영양표준 등 펫푸드 분류체계 및 특수목적 영양사료의 영양성분·안전 기준 마련
- 5.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 필수·선택 항목 기준 마련해 진료비 부담 경감
 - 표준 진료체계를 구축해 진료비 투명성 제고
- 6. 유기·유실동물 입양가정에 최대 25만원의 입양지원금 지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1. 동물학대 예방 및 피학대동물 보호체계 강화

- 구조부터 재입양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정립
- 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 인력 추가 보강 및 민간단체·수의사회 공조 체계 강화
- 단순 격리를 넘어 치료와 행동 회복까지 책임지는 통합적 피학대 동물 보호체계 구축

2. 유실·유기동물 발생 저감과 동물보호센터 복지 개선

-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의 구조·치료·돌봄·입양 및 시민교육 기능 강화
- 시 지원사업(우리동네 동물병원·펫위탁소 등) 및 반려견 놀이터 출입을 '등록 동물'로 제한하여 등록률 제고
- 반려동물 시민교육 운영 확대 (목표 인원: 2,700명)

3. 동물원·수족관 등 전시시설 내 동물복지 강화

- 서울동물원의 선진 복지 모델을 바탕으로 관내 민간 전시·판매 시설의 복지 기준 상향 평준화
- 유예기간 종료 후 잔여 개체(5개소 114마리 대상)를 환경부 야생동물 보호시설 및 서울대공원과 협의 후 인계
- 전시 금지 야생동물 전시·판매업체 정기 점검 (연 2회, 금지행위 위반 및 미신고 개체 단속)
- 사이버 단속반과 연계하여 '무허가 야생동물' 불법 거래 행위 집중 단속

4. 농장동물 복지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 전환

- 소비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 지원 대신 지속가능한 축산을 견인하는 '가치 소비 시장 조성'에 주력
- 채식 전문 음식점 발굴 확대 및 공공급식 내 동물복지 축산물 도입 단계적 확대
- '서울시 동물보호의 날' 활용 및 동물복지 인증제 홍보 강화로 시민의 자발적 윤리적 소비 확산

5. 동물복지 전담조직·예산·시민참여 거버넌스

- 시민·전문가·관련 단체와의 상시 협력체계 및 현장 의견 수렴 강화
- 반려동물·유기동물·전시동물·야생동물 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자문위원회 및 정책 협의체' 운영
-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민관 협력 사업 추진

6. 도심 길고양이 공존 정책과 TNR의 질 관리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지연 및 갈등 우려로 인가 단계의 획일적 의무화는 신중 접근
- '가이드라인 내 권고안 마련' 및 '조합과의 자발적 협력' 등 자치구별 여건을 고려한 도심형 공존 모델 종합 검토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1. 수도권 최대규모 서울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

-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수영장, 놀이터 훈련소
- 추모관: 테마파크 인근 장묘시설 조성, 화장로, 봉안당, 추모공간 등
- 취약계층 및 유기동물 입양 시민 대상 테마파크 이용료와 추모관 장례비용 지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동물공약 자료집

2. 유기동물 더 따뜻하게! '서울시립 동물복지 지원센터'
 - 유기·피학대·사육포기 동물의 치료, 입양, 반려동물 교육 등 서울형 동물복지 서비스 제공 (현재 3개소 → 30년까지 6개소)
3. 반려견, 반려인이 함께 힐링하는 '반려견 놀이터, 펫가든' 확충
 - 반려견 놀이터: 2030년까지 반려견 놀이터 20개소 확대
 - 정원형 휴식처 '펫가든': 반려견의 감각 활동을 돕고 시민이 함께 쉴 수 있는 정원 '펫가든'을 2030년까지 5개소('26년 매현시민의 숲 등) 신규 조성
4.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의료·돌봄 서비스'
 - 공공 반려의료·돌봄 확대: 권역별 공공동물병원 지정, 긴급 돌봄 위탁소 확대로 취약계층 반려인 부담 경감
 - 맞춤형 반려동물 돌봄 지원: 어르신 대상 방문 돌봄서비스, 고립은둔 청년대상 '마음나눔개' 운영
5. '반려동물 진료비 소득공제' 추진
 - 반려동물 진료비 세제 지원: 연간 100만원 한도의 진료비 소득공제 도입 추진
 - 반려동물 양육 부담 완화: 입법 추진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가계 부담 경감 지원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없음

정의당	권영국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1. 동물학대 예방 및 피학대동물 보호체계 강화

- 목표: 서울시 동물권 조례 제정, 전담팀 구성, 공공 동물복지 체계 구축
- 조례·부서: '동물권 조례'로 개정하여 동물을 생명으로 규정, 학대 전담팀(공무원·수의사·경찰) 구성
- 내용: 학대 요소 있는 행사·축제 중단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 센터/병원/장례식장/의료공제회 확대

2. 유실·유기동물 발생 저감과 동물보호센터 복지 개선

- 목표: 공공 복지체계 구축으로 안락사·자연사율 감소 및 입양률 제고
- 조례·부서: '유실·유기동물 보호팀'(계도·과태료) 및 '공공 동물복지 인프라팀'(인프라 전담) 설립

3. 동물원·수족관 등 전시시설 내 동물복지 강화

- 목표: 전시시설 전수조사 및 복지평가 완료, 부적합 시설 퇴출 로드맵 수립
- 조례·부서: 2028년 허가제 전환 대비 서울시 허가 기준 운영 세칙 마련, '전시동물 복지팀' 구성

4. 농장동물 복지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 전환

- 목표: 서울시 공공급식·공공기관 식당 내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확대 및 채식권 보장
- 조례·부서: 서울시 공공급식 조례에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우선 구매 조항 신설, 관계부서 TF 구성

5. 동물복지 전담조직·예산·시민참여 거버넌스

- 목표: 동물복지 전담부서 설치, 안정적 예산 확보, 동물복지위원회 권한 강화
- 조례·부서: 야생·반려·재난·교육을 총괄하는 '동물복지 전담국' 설치 및 산하 위원회 강화

6. 도심 길고양이 공존 정책과 TNR의 질 관리

- 조례: 동물권 조례에 TNR 품질기준 및 재개발 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 의무 명시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1. 반려동물 의료비·진료비 지원
 - 자치구별 공공 동물병원 단계적 설립 및 저소득 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시민이 함께 운영하는 동물의료공제회 결성 지원해 의료비 부담 분산
 - 공공 동물장례식장 설치 및 확대
2. 동물돌봄 공공일자리 확대
 - 서울시 직접 고용 기반의 동물돌봄·보호 공공일자리 마련
 - 학대 의심 모니터링, 유기·방치 위험 동물 보호, 야생동물 응급 구조, 길고양이 TNR 관리, 보호센터 운영 보조 등을 안정적 일자리로 만들어, 동물복지 현장의 만성적 인력 부족 해소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1. AI 반려동물 통합플랫폼 구축
 - 등록, 의료, 민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펫산업 전반을 육성해 지역경제와 연계
 - 책임 입양·양육 교육 체계화
 - 반려문화·산업 육성
2.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없음

정의당	강은미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1. 동물학대 예방 및 피학대동물 보호체계 강화
 - 공동 대응 매뉴얼을 수립
 - 신고 접수 시 현장에서 '긴급 격리 조치' 시행 지원
 - 전문 훈련사 배정
 - 입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 평가와 정서 케어를 보호 과정에 포함
 - 민간 보호시설 및 위탁 가정과 연계해 쾌적한 임시보호 환경 제공
 - 재학대 여부를 체크하는 '사후 관리제' 도입

2. 유실·유기동물 발생 저감과 동물보호센터 복지 개선

- 읍면 지역 실외사육견(마당개) 대상 '이동식 중성화 수술 차량' 운영
- 입양 전 필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이수 시민 혜택 제공
- 노후 주거단지·농촌 중심 정기 등록 캠페인 및 단속 병행
- 보호센터 전문 의료 인력 확보를 통한 질병 관리 강화 및 자연사 최소화
- 성격·건강·훈련 상태 확인 가능한 '스마트 입양 플랫폼' 구축
- 장기 체류 방지를 위한 시민 임시보호 독려 및 사료비·의료비 지원
- 반려동물 입양센터 신설 및 교육장 결합 복합 공간 조성

3. 동물원·수족관 등 전시시설 내 동물복지 강화

- 전시시설 전수 조사를 통한 허가 기준 충족 등급 분류 및 행정 조치
- 폐업 시설의 동물 무단 매각·방치 방지를 위한 '전업 지원금' 및 '시설 철거비' 지원
-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오락형 체험' 엄격 제한 및 교육 프로그램 중심 개편
- 폐업 시설 동물을 보호할 공공 보호시설 또는 거점 보호소 확보
- '동물복지 시민 감시단' 구성을 통한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

4. 농장동물 복지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 전환

- 산란계 케이지, 모돈 스톨, 밀집사육 방지 조례 제정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육성 지원 조례 제정, 예산 배정
- 폭염·한파·재난 시 대량폐사·생매몰 방지용 '농장동물 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 적정 사육 밀도 유지, 화재 알림 및 비상 발전기 설치 유도, 대피 거점 지정
- 무조건적 살처분 지양, 선별 살처분 및 백신 정책 우선순위 설정 (인도적 방법 준수)
- 살처분 작업자 심리적 트라우마 방지 매뉴얼 마련

5. 동물복지 전담조직·예산·시민참여 거버넌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동물복지정책국(정책과·보호과·의료과)' 편제 및 컨트롤타워 구축
- '동물복지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성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특별시 및 시군구 단위 반려동물 문화축제 활성화 및 연계 창업 지원
- 위탁 운영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전면 직영 전환으로 책임성 강화

6. 우치동물원 동물복지 우선 운영과 판다 유치 추진 관련

- 특별시 동물복지 조례 및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조례 제정
- 우치동물원을 'UNZOO' 개념에 입각한 생태·치유동물원으로 전환 (사육환경 및 복지 향상)
- 관람·오락 중심에서 복지·교육·멸종위기종 보전 중심으로 운영 관점 전환
- 판다 대여 추진 시 '동물복지 기준 충족 여부'를 선결 조건으로 검토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1. 특별시 '동물복지정책국' 편제직영
 - 국단위 전담부서 편제
2. 지자체 운영 동물보호센터 직영화
 - 목포 동물보호센터 직영화
3. 동물복지 농장 전환 지원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
4. 동물의료공제회(협동조합) 설립 지원
 - 동물 의료비 경감
5. 공공 동물병원 지정(협동조합) 설립 지원
 -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치료 지원
6. 우치동물원, 'UNZOO 생태동물원' 추진
 - 생태 동물원 추진
7. 반려동물 축제 개최
 - 펫티켓 전파, 동물권 인식 전환
8. 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제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동물공약 자료집

- 반려동물 인식 개선
- 9. 채식 선택권, 주 1회 채식 식단 보장
 - 채식권 보장
- 10. 대체 단백질, 식물성 식품 전환 지원
 - 채식권 보장

진보당	이종욱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1.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
 - 치료, 훈련, 상담까지 통합케어
 - 반려동물 심포 운동장
 - 길고양이 돌봄 노인 일자리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시·군·구별 운영

3.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1. 동물학대 예방 및 피학대동물 보호체계 강화

- 비전: 학대 받은 동물은 부산 어디서든 즉시 보호 -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한 부산
- 목표: 권역별 긴급보호 거점 구축, 동물학대 전담 인력 확보, 신고 후 긴급출동 응답체계 구축
- 정책: 종합계획 수립(예산, 조직 등 실현 방안), 시민 참여형 '동물학대 예방 감시단' 확대 운영

2. 유실·유기동물 발생 저감과 동물보호센터 복지 개선

- 비전: 유기동물 없는 부산 - 발생을 줄이고, 들어오면 살아나가는 보호센터, 책임있는 반려문화가 정착된 동물복지 선도도시
- 목표: 유기동물 발생수 감축, 동물등록률 증가, 보호센터 환경복지 개선
- 정책: 동물등록 시비 매칭 사업 실시, 스마트폰 활용 동물등록제 시범 도입, 성실 반려인 대상 인센티브(부산 시 공공시설 할인 등), 관내 위탁보호소 전체 복지 환경 실태조사

3. 동물원·수족관 등 전시시설 내 동물복지 강화

- 비전: 부산의 모든 전시동물은 고유의 습성에 맞게 살아갑니다. 보전의 존재로, 시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전시시설 도시 부산
- 목표: 반생태적 체험 근절, 종 보존 기능 강화, 종 보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 정책: 동물복지 전문가, 수의사, 시민단체 참여 동물원 검사관 제도 활성화, 동물복지 위반 시 행정처분

4. 농장동물 복지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 전환

- 비전: 부산에서 사육·도축·유통·소비되는 모든 농장동물은 고통 없이 살 권리를 가집니다. 착한 축산으로 전환하는 농가를 부산시가 지원하며, 시민의 밥상에 동물복지가 담깁니다.
- 목표: 관내 농가 동물복지 인증 확대, 도축장 인도적 처리 이행 점검,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공공소비 확대
- 정책: 동물복지 축산물 육성 조례 제정, 탄소중립·생명존중 부산형 상생축산 모델 구축

5. 동물복지 전담조직·예산·시민참여 거버넌스

- 비전: 시민이 제안하고 구군이 집행하는 '통합형 동물복지 거버넌스 완성'
- 목표: 행정체계 일원화, 구·군 인프라 강화, 시민권한 강화
- 정책: 동물복지 전담 부서 개편, 부산형 동물복지 거버넌스 모델 표준화 및 전국 확산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1. 1인 가구 취약계층 영양·의료 복지: “반려동물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취약계층 ‘반려동물 주치의 제도’ 도입
 - 어르신-유기견 동행 복지(임시보호 매칭), 반려동물 긴급 돌봄 서비스
2. 야생동물과의 공존: “새들의 안전한 하늘길, 유리창 충돌 제로 도시”
 - 공공건축물 투명 유리창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 부착 의무화
 - 민간 건축물 부착 지원 사업 및 환경 인센티브
3. 라이프스타일 및 관광: “반려동물 친화(Pet-Friendly) 관광 벨트”
 - 반려동물 동반 가능 해안 해수욕장 시범 운영
 - ‘동물복지 공공파크’ 건립
 - 부산 펫프렌들리 인증제 도입 및 마케팅 지원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1. 동물학대 예방 및 피학대동물 보호체계 강화
 - 구·군, 경찰, 소방, 수의사회, 단체 공동대응 체계 및 부산형 학대 대응 매뉴얼 정비
 - 긴급보호, 치료비 지원, 행동평가, 사회화, 입양 연계 등 회복 중심 보호체계 구축
 - 관련 조례·예산 정비 및 동물보호관·협력 동물병원 네트워크 확대
2. 유실·유기동물 발생 저감과 동물보호센터 복지 개선
 - 등록률 제고,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입양 전 교육, 유기 예방 캠페인 등 예방형 정책 추진
 - 공공·위탁 보호센터 사육환경, 의료·방역, 입양상담, 정보공개 수준 정기 점검
 - 임시보호·입양 연계 및 입양 후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안락사·자연사 저감
3. 동물원·수족관 등 전시시설 내 동물복지 강화
 -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에 맞춘 사육환경, 인력, 질병·안전, 휴·폐원 동물관리계획 점검
 - 관내 전시시설(체험형 포함) 전수조사·복지평가 실시 및 부적합 시설 개선명령·전환 요구
 - 먹이주기, 만지기, 공연 등 반복 스트레스 프로그램 제한 및 공영시설 야생동물 신규 도입 신중
4. 농장동물 복지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 전환
 - 동물복지 인증 농가 전환 지원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 내 복지 기준 반영 검토
 - 밀집사육 완화, 환기·바닥 개선, 폭염·재난·전염병 대응 매뉴얼 정비
 - 교육청·구군 등과 협의하여 공공급식·공공구매 내 동물복지 축산물 활용 단계적 확대
5. 동물복지 전담조직·예산·시민참여 거버넌스
 - 부산시 동물복지 전담 기능 강화 및 구·군 협력체계 정비 (행정의 통합성 제고)
 - 수의사, 단체,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 역할 실질화 및 현장평가·자문 정례화
 - 보호, 긴급구조, 센터 개선, 시민교육, 중성화, 전시시설 점검에 예산 우선 배분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1.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1. 반려동물 공공의료보험 시범사업 추진
 - 동물등록과 연계한 공공의료보험 모델을 단계적으로 도입
 - 동물등록·진료정보·보험 청구가 연결되는 디지털 기반도 함께 마련
2.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확대
 - 부산수의사회, 구·군과 협력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없음

4. 대구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1. 전국 최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기 조성
2. 전통시장 등 다중 이용 공간 반려동물 대기공간과 위생, 안전 관리시설 마련
3. 입원 등 돌봄공백 발생 시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4. 반려동물 신규등록 비용 지원 확대
5. 반려동물 시립 화장장 및 보건소 건립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1. 대구대공원 반려동물테마파크 조기 조성
 - 실내외 반려견 운동장과 교육센터, 입양홍보관 등
2. 전통시장 등 다중 이용 공간 반려동물 대기공간과 위생, 안전 관리시설 마련
3. 입원 등 돌봄공백 발생 시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4. 반려동물 신규등록 비용 지원 확대
5. 반려동물 시립 화장장 및 보건소 건립
6. 대구시 내 동물복지 전담 조직 신설
7. 유기동물 보호체계 개선
 - 유기 예방, 구조, 치료, 입양까지 이어지는 공공형 통합 보호 시스템 구축
 - 실종 반려동물의 신속한 귀가와 유기동물 입양 연계 지원하는 '동물복지 통합 플랫폼' 마련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1. 반려동물 파크 등 15분 생활권 문화도시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없음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1. '펫-프렌들리 친화 대구' 조성

5.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1. 동물학대 예방 및 피학대동물 보호체계 강화
- 매뉴얼 수립 검토
2. 유실·유기동물 발생 저감과 동물보호센터 복지 개선
(공약에 반영함)
3. 동물원·수족관 등 전시시설 내 동물복지 강화
-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의를 위해 노력
4. 농장동물 복지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 전환
-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의를 위해 노력
5. 동물복지 전담조직·예산·시민참여 거버넌스
- 동물복지 전담부서까지는 어려움 예상되지만, 기존의 농축산과 동물보호담당 인력 증원 등의 형식으로 전담조직 강화 노력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1. 반려동물 장례시설 '인천 무지개다리센터' 설립
2. 반려동물 입양 시 인식칩 지원 및 반려 생활 교육 완화
3. 길고양이 중성화 보호기간 확대 및 사후케어 강화
4. '인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속 완공 및 단계적 확대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1. 입양 시 내장형 인식칩 비용 지원 및 반려 소양 교육 체계화
2. 구조 동물 치료·행동교육·재입양 통합 거점 구축
- '인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공기 단축 및 신속 완공 추진
3. 농축산과 동물보호담당 인력 증원을 통한 전담 조직 관리 역량 강화
4. '인천형 길고양이 보호 대책' 수립
- TNR 수술 후 회복(보호) 기간 연장 및 사후 관리 환경을 개선
5. 반려동물 공공 장례시설(화장시설) 설립
- '반려동물 무지개다리센터' 관내 신설로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 구축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1. 반려동물 공원, 화장시설 마련
2. 반려동물 진료지원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없음

개혁신당	이기봉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 1. 동물학대 예방 및 피학대동물 보호체계 강화**
 - 신고부터 구조·치료·보호·입양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
 - 동물보호관 및 전담 수의인력 단계적 확대, 관계기관(경찰·소방·단체 등) 공동대응 네트워크 구축
 - 임시보호·치료비 예산 확대 및 회복(행동평가·사회화) 중심 프로그램을 통한 안전한 입양 연계
 - 임기 내 광역단위 표준 대응 매뉴얼 마련 및 관련 조례·예산 확보
- 2. 유실·유기동물 발생 저감과 동물보호센터 복지 개선**
 - 동물등록률 제고,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사업 확대, 입양 전 기본교육 및 유기 예방 캠페인 정례화
 - 공공·위탁 보호센터 사육환경·의료·방역 수준 정기 평가 및 시설개선 지원 확대
 - 장기보호 동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임시보호 연계 및 입양 활성화
 - 보호센터 정보공개 확대 및 자연사육·안락사육 저감 목표 단계적 추진
- 3. 동물원·수족관 등 전시시설 내 동물복지 강화**
 - 관할 전시시설 전수조사·복지평가 실시 및 기준 미달 시설 개선명령·단계적 정비
 - 과도한 체험형 프로그램 및 스트레스 유발 공연·접촉 프로그램 개선 또는 중단 검토
 - 행동풍부화, 은신처 확대, 적정 사육면적 확보 등 실질적 복지기준 강화
 - 휴·폐원 및 재난 대비 구조·이송·보호 매뉴얼 마련 및 보전 중심 운영체계 전환
- 4. 농장동물 복지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 전환**
 - 동물복지 인증 농가 확대 지원, 시설 개선비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공공급식 및 공공구매 과정 내 동물복지 기준 반영 노력
 - 폭염·한파·재난·전염병 대비 농장동물 보호 매뉴얼 마련 및 대량폐사·생매물 최소화용 긴급 예산 확보
 - 축산 악취 개선 등 친환경 축산정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 5. 동물복지 전담조직·예산·시민참여 거버넌스**
 - 동물복지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강화, 관련 예산 단계적 확대
 - 시민단체·전문가·수의사회·업계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현장 의견 반영
 - 정기적 시민 의견수렴·정책평가 실시 및 시·군·구 간 동물복지 정책 격차 완화 지원
 -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및 캠페인 지속 추진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없음

6. 대전광역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1. 반려동물 친화도시 기반 조성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없음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없음

개혁신당	강희린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없음

7. 울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없음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1.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건립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없음

진보당	김종훈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1. 동물학대 예방 및 피학대동물 보호체계 강화

- 임기 내 '반려동물 친화센터' 운영을 통한 구조·보호·입양·교육 전담 시스템 구축

2. 유실·유기동물 발생 저감과 동물보호센터 복지 개선

- 경제적 유기 방지를 위한 공익형 표준수가제 단계적 도입 및 보험료 지원
- 동물등록률 상향을 위한 '찾아가는 동물등록 지원사업' 확대
- 재유기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친화센터 내 입양 전 의무 교육 시간 확대
- 보호센터 안전·위생 기준 충족 지원 및 조례를 통한 합리적 입지·운영 기준 마련

3. 동물원·수족관 등 전시시설 내 동물복지 강화

- 울산 지역 전시동물 시설 전수조사 및 실태 점검 (사육환경·인력·질병·체험 등)
- 2028년 허가 유효기간 종료 전 부적합 시설 책임 관리 (개선·전환·퇴출)
- 휴·폐업 및 재난 발생 시 전시동물 보호계획 마련

4. 농장동물 복지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 전환

- 사육환경 조사 및 복지형 사육 전환 지원 (밀집사육 완화, 환기·바닥·분뇨 개선 등)
-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시설개선비 지원, 전문 컨설팅, 복지 축산물 판로 확대
- 학교·공공급식 및 공공구매에서 동물복지·친환경 축산물 사용 단계적 확대
- 폭염·한파·재난·전염병 대비 농장동물 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및 예산 마련

5. 동물복지 전담조직·예산·시민참여 거버넌스

- 반려동물 친화센터 설치 및 울산시·구·군 담당부서 간 상시 협의체 구성
- 보호센터 개선, 치료·입양 지원, 학대 대응, 시민교육, 재난 보호 예산 별도 편성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
- 보호센터 운영 현황(입양률, 안락사율 등) 공개 및 '시민참여형 평가체계' 도입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1. 반려동물 친화센터 운영
2. 도심 야생동물 보호 방안 마련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1.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 공익형 표준수가제 단계적 도입 및 민간 확산, 보험료 지원
2. 반려동물 친화센터 운영·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보호자 교육·청소년 봉사
3. 유기동물 보호부터 입양홍보, 입양후 지원사업 등 전담 시스템 구축
4. 도심 유기동물 구조, 중성화 등 개체 수 조절과 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
5. 도심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보호 방안 마련

8. 세종특별자치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1. 공원, 주거지 인근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2. 도농복합형 반려동물 동반 숙박 캠핑 인프라 조성
3. 세종형 공공 반려동물 의료 돌봄 지원 강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1. 반려동물 종합타운 및 공공보건센터 조성
2. 동물복지진흥원 유치
3. 공공 가족 승마 체육공원 건립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없음

9.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1.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 시범 운영
 - 경기도 '진료비 표시제 동물병원' 지정, 참여 병원에 '경기 착한 동물병원' 인증
 - 지역화폐 가맹점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주요 진료 항목(초진료,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일반 혈액검사 등)에 대한 평균 비용 공표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1. 동물학대 예방 및 피학대동물 보호체계 강화
 - 위기 동물(학대·유기·사육포기 등) 구조/보호 광역 단위 매뉴얼 구축 및 시스템 마련
 - 긴급 구조 및 위기 동물 관련 예산 확대
 - 위기 동물 보호시설 및 반려마루 운영 확대
 -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명예동물보호관' 확대 운영
2. 유실·유기동물 발생 저감과 동물보호센터 복지 개선
 - 등록 예산 지원, 찾아가는 등록, 비문등록, 장례비 연계 등으로 동물등록률 제고
 -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 표준업무 지침 마련, 운영 컨설팅 및 '경기도형 동물보호센터 인증제' 도입
 - 유기동물 보호센터 신축/증축/개보수 예산 확대
 - 파양/유기 고민 단계 전문가 상담 시스템 구축
3. 동물원·수족관 등 전시시설 내 동물복지 강화
 - 공영·민간·체험형 등 모든 동물원/전시시설 주기적 점검·단속 및 인력·예산 배치
 - 전시시설 평가 기준 마련 및 미달 시설 대상 단계적 이행 로드맵 구축
 - 체험형 프로그램 기준 마련 및 평가를 통해 생태교육으로의 이행 추진
 - 경영난 등으로 방치되는 전시동물 대상 긴급보호계획 수립
4. 농장동물 복지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 전환
 - 경기도 농장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및 복지형 시설 전환 농가 현대화 자금 지원
 - 군 급식 및 공공기관 식당 내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공급 비율 확대 (판로 확보)
 - 자연재해·화재 등 대응 예산 확대 (가축재해보험 등)
 - 온·습도·환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 대응 '스마트 축산 시설' 보급 가속화
5. 동물복지 전담조직·예산·시민참여 거버넌스
 - 반려가구 밀집 기초자치단체 중심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및 예산 지원
 - 동물복지위원회에 주요 정책 심의 의견 제출권 부여 (위상 강화)
 - 권역별 동물복지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한 맞춤형 정책 발굴
 - 예산 내역, 입양 현황, 학대 처리 결과를 공개하는 '경기 애니웰(AniWel) 포털' 구축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1. '반려동물 긴급돌봄 서비스'
 - 명절, 질병, 상해 등 돌발상해 발생 시 반려동물 긴급 돌봄
2. 공공 반려동물 건강센터
 - 기초검진, 진찰, 혈액검사, 건강상담 제공
3. 공공 반려동물 장례·추모 공간
 - 공공 장례 서비스와 추모공간 확충
 - 이별의 슬픔까지 보듬는 '반려인 마음 치유(펫로스) 상담 서비스'
4. 유기동물 예방·보호 시스템 강화
 - 유기·파양 예방을 위한 전문가 상담 제공
 - 유기동물 보호센터 신설 및 시설·운영 개선

- 찾아가는 동물등록 확대
- 비문 등록 확대

진보당	홍성규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1. 동물학대 예방 및 피학대동물 보호체계 강화

- 유기동물 보호소의 지자체 직영 전환 및 전담 시스템 구축
- 현장 조사 실효성을 위한 동물보호관 증원 및 전담 수의 인력 확보
- 경찰·검찰·소방·단체 즉시 동시 출동 및 역할 분담 '공동대응 표준 매뉴얼' 수립

2. 유실·유기동물 발생 저감과 동물보호센터 복지 개선

- 민간위탁 보호센터의 사육환경 개선 및 자연사율 저감 목표 관리·감독 시행
- 공공임대·민간임대 주택 내 반려동물 허용 기준 완화
- 공공 반려동물병원 설립을 통한 의료비 경감 및 등록률 제고
- 유기동물 입양 가구 양육비 지원 확대, 사전 교육 및 사후 모니터링·상담 진행
- (기타 인프라) 반려동물 장례식장, 놀이터, 돌봄센터 운영

3. 동물원·수족관 등 전시시설 내 동물복지 강화

-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형 전시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복지평가 실시
- 기준 미달 시설 대상 2028년까지 '단계적 폐쇄 로드맵' 적용 및 퇴출
- 폐업·재난 시 암시장 매각 방지를 위한 '전시동물 긴급 구조·이송·보호 계획' 수립
- 반생태적 체험·공연 전면 중단 및 엄격한 '경기도 전시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제정

4. 농장동물 복지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 전환

- 산란계 케이지, 모돈 스톨 등 밀집 사육 방식 폐쇄 및 개선 목표 제시
- 축산환경 개선 보조금 지원 시 동물복지 기준 최우선 반영 조치
- 도축장·가공장까지 동물복지형 전환 지원 및 시설 전환비 지원
- 학교·군대·공공기관 급식에 동물복지 축산물 우선 공급 의무화
- 대량 폐사·생매물 방지용 '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및 독립 특별 재난 예산 편성
- 축산업 종사 농민들의 필수 복지(의료·연금 등) 보장 대책 마련

5. 동물복지 전담조직·예산·시민참여 거버넌스

- 경기도 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 설치 및 지휘
- '동물복지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격상 (현장조사·행정감시권 부여)
- 시·군·구별 '동물복지 전담팀' 신설 및 읍·면·동 단위 '마을거버넌스' 활성화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1. 반려동물 공공병원 설치 및 확대
2. 반려동물 필수접종 무료, 진료비 표준화 실현
3. 유기동물 보호, 입양 지원 전담 시스템 마련
4. 반려동물 공공 장례식장 운영
5.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확대
6. 길고양이 모니터링 사업 확대

개혁신당	조용천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없음

10. 강원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1. 동물학대 예방 및 피학대동물 보호체계 강화

- 위기동물 보호 및 입양 지원 강화 추진
- 제안된 세부 과제는 당선 후 강원도 현황 파악을 거쳐 단계적으로 책임 있게 검토

2. 유실·유기동물 발생 저감과 동물보호센터 복지 개선

- 실생활 밀착형 '반려동물 공공진료 확대' 및 '진료비 부담 완화' 공약 반영
-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지원 강화',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충' 등 즉각 실행 가능한 정책 추진
- 유기 예방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지원센터' 등 기존 인프라의 기능 우선 파악 및 확대 방안 검토

3. 동물원·수족관 등 전시시설 내 동물복지 강화

- 당선 후 강원도 내 관련 현황 파악 후 단계적 추진 검토

4. 농장동물 복지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 전환

- 산불, 폭설 등 대형 재난이 빈번한 강원도 특수성을 고려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에 동의

5. 동물복지 전담조직·예산·시민참여 거버넌스

- 무분별한 신설보다 도청 조직 전체의 인력 현황과 예산 구조에 대한 정밀 진단 선행
- 행정 효율성 극대화 및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한 최적의 조직 체계 검토

6. 재난 시 동물 구조 대응 체계

- 반려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을 아우르는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기존 재난 대피 시스템과의 유기적 결합 추진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1. '반려동물 공공진료 확대'와 '진료비 부담 완화'
2.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지원 강화',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충' (공약화 예정)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1.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1.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2. '반려동물 메모리얼 파크' 조성
- 화장부터 입양·놀이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

11. 충청북도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1.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 처리시스템 도입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없음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없음

12.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1. 공공동물 장례화장시설 설치
2. 반려동물 장묘비까지 일부 지원 '바우처 사업'
3.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1. 홍성 반려동물 시험평가센터 건립

13. 전북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없음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없음

진보당	백승재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1. 동물학대 예방 및 피학대동물 보호체계 강화
 - 목표: 학대 사건 발생 시 '골든타임' 내 구조·격리 100% 달성 및 재발률 0% 지향
 - 조례·예산: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 연간 10억 규모 '긴급구조 기금' 신설
 - 전담부서: 광역 단위 '동물복지 특별사법경찰단' 운영, 시·군·구별 동물보호관 최소 2인 배치
2. 유실·유기동물 발생 저감과 동물보호센터 복지 개선
 - 목표: 유기동물 발생 30% 감축, 도내 공공 보호센터 입양률 70% 달성
 - 조례·예산: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 조례 제정, 센터 환경 개선 및 직영 전환에 연간 50억 원 편성
 - 전담부서: 시·도 동물보호센터 관리팀 신설 (위탁 센터 상시 감독·평가)
3. 동물원·수족관 등 전시시설 내 동물복지 강화
 - 목표: 2028년 허가 유예 종료 대비 부적합 시설 100% 정비 및 체험형 카페 전수 조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동물공약 자료집

- 조례·예산: 「동물원·수족관 관리 조례」 제정, 시설 개선 및 이관 비용 예산 확보
- 전담부서: 야생동물 관리 전담팀 및 외부 전문가 참여 '전시동물 복지평가위원회' 상설 운영
- 4. 농장동물 복지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 전환**
- 목표: 동물복지 인증 농가 2배 확대, 공공급식 내 동물복지 인증 제품 비중 20% 달성
- 조례·예산: 동물복지 축산 전환 지원 조례 제정, 시설 현대화 자금(저리 융자) 및 복지 직불금 편성
- 전담부서: 축산정책과 내 '동물복지 축산전환팀' 신설
- 5. 동물복지 전담조직·예산·시민참여 거버넌스**
- 목표: 단체장 직속 '동물복지위원회' 실질화 및 동물복지 예산 비중 2배 증액
- 조례·예산: 「민관 협동 동물복지 지원 조례」 제정, 시민 참여 예산제 내 동물복지 쿼터제 할당
- 전담부서: '동물복지국' 또는 '동물복지과'로 조직 격상, 시·군 단위 전문직 공무원 증원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1.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확대 및 '공공 동물병원' 시범 운영
2. TNR 확대 및 '표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
3. 공공 반려동물 메모리얼 파크 조성 및 장례 문화 캠페인
4. 전북 인구 감소 지역(무주, 진안, 장수 등) 펫 친화 마을(Pet-friendly Village) 조성
5. 취약계층 가구의 반려동물 돌봄을 돕는 '우리동네 동물보호사' 일자리 사업 추진

14. 경상북도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 1. 동물학대 예방 및 피학대동물 보호체계 강화**
- 몰수 및 사육금지 명령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및 조례 제정 검토 (학대 범위 확대)
- 구조·격리부터 수사 협조, 입양까지 아우르는 관계기관 공동대응 매뉴얼 작성 및 체계 구축
- 2. 유실·유기동물 발생 저감과 동물보호센터 복지 개선**
-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 도입, 등록률 제고, 유기 예방 캠페인 강화
- 공공·위탁 보호센터 사육환경 개선 및 동물복지 기준 마련
- 자연사육 저감 및 보호·의료 예산 현실화 추진
- 3. 동물원·수족관 등 전시시설 내 동물복지 강화**
- 관할 동물원·수족관·체험형 전시시설 실태 파악 및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공영동물원 내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 및 생물다양성 보전·연구·교육 기능 지원 검토
- 4. 농장동물 복지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 전환**
- 복지 가이드라인 실천 농가 대상 소득 감소분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 검토
-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판로 확대 및 공공급식 연계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
- 5. 동물복지 전담조직·예산·시민참여 거버넌스**
- 자치경찰 내 동물학대범죄 전담팀 및 지자체별 동물복지 전담부서 설치 추진
-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및 시민·전문가·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6. 청도 싸움소 관련 정책**
- 일률적 중단보다 싸움소 훈련·이동·경기 과정의 복지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검토
- 7. 재난 시 동물 구조 대응 체계**
- 반려동물 동반 재난대피소 운영 기준 마련 및 임시 계류 공간 확보 추진
- 피해동물 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및 긴급 대피 체계 마련 검토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1. 시군마다 반려동물 동반 명소 1개 이상 조성
2. 반려동물 내장칩 최초 등록비용 및 중성화 비용 지원
3.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및 추모공원 조성
 - 화장장 이용 시 장례 서비스 비용 지원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1. 반려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2. 공공 화장장·추모공원 조성 및 장례서비스 비용 지원 방안 마련
3.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및 찾아가는 진료·상담 서비스 확대
4. 관광·치유·문화 연계 '경북형 반려동물 친화산업' 육성
5. 반려동물 놀이터·쉼터 확충 및 에티켓 교육을 통한 책임양육 문화 조성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없음

15. 경상남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 '경남형 펫보험' 도입
- 유기동물 입양·접종 통합 관리 체계 도입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1. 동물학대 예방 및 피학대동물 보호체계 강화
 - 신고-출동-구조-보호를 연계하는 광역 대응체계 구축
 - 전담인력 확충 및 전문성 확대
2. 유실·유기동물 발생 저감과 동물보호센터 복지 개선
 - 동물등록에 대한 집중 캠페인 실시
 - 등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입양 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동물 관련 단체와의 협약 및 조례를 통해 실행체계 구축

3. 동물원·수족관 등 전시시설 내 동물복지 강화

- 도내 모든 동물원·수족관·유사 전시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 모든 허가시설에 대해 휴·폐원 시 동물처리 계획 의무화 협력망 구축

4. 농장동물 복지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 전환

- 시설개선 지원 확대, 환기시설 개선, 적정 사육밀도 확보 등 도비와 시군비를 연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 확대 내용 검토

5. 동물복지 전담조직·예산·시민참여 거버넌스

-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검토

6. 민속 소싸움 관련 동물복지 정책

- 지역의 역사와 주민들의 생업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개선과 대화를 병행해 문화·체험 중심으로 소싸움을 발전시키는 방향 검토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없음

진보당	전희영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없음

16.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무응답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1. '제주형 반려동물 의료비 공제조합' 설립
 - 매달 소액의 조합비 납부한 반려가구에 갑작스러운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2. 관광객 반려동물 유기 방지 대책
 - '반려견 입도 책임제' 도입
 - 항공과 항만을 통해 제주에 들어오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인공지능 비문 인식 기술을 활용해 간편 등록을 마치고, 출도 시 동행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
3. '혼저옵서개' 프로젝트 추진
 - 반려동물 전용 좌석 확대
 -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인증업체 확충
4. '지역밀착형 펫테크 클러스터' 조성
 - 연간 펫 관광객 20만 명 유치와 3000억원 규모의 펫 산업 활성화

5. 독서, 걷기, 악기, 환경보호, 반려동물, 디지털 학습 등 시민이 조직한 소규모 동아리 지원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
-------------	---------------

▶ **동물자유연대 동물공약 질의서 답변**

1. 동물학대 예방 및 피학대동물 보호체계 강화

- 신고 접수부터 구조·치료·임시보호·입양 연계까지의 협력 체계 강화
- 경찰·수의사회·민간단체와의 '공동 대응 매뉴얼' 마련 검토
- 피학대동물 복귀 방지를 위한 회복 중심 보호체계 및 긴급 보호 기반 단계적 강화

2. 유실·유기동물 발생 저감과 동물보호센터 복지 개선

- 동물등록 활성화, 유기 예방 교육·홍보,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 확대
- 보호센터의 사육·방역·의료 환경 개선 및 투명한 운영 관리 체계 강화
- 입양 및 임시보호 활성화를 통한 안락사 저감 정책 검토

3. 동물원·수족관 등 전시시설 내 동물복지 강화

- 법령·기준에 따른 전시시설 점검 및 복지 수준 관리 강화
-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체험형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방향 검토
- 제주의 생태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책임 있는 관리체계 마련

4. 농장동물 복지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 전환

- 축산환경 개선 및 동물복지형 사육 전환 지원 (농가 경쟁력 연계)
- 폭염·전염병·재난에 대비한 농장동물 대응체계 강화
- 농가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개선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추진

5. 동물복지 전담조직·예산·시민참여 거버넌스

- 전문가·시민단체·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체계 강화 및 정책 반영
- 정책의 지속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조직과 지원체계 검토

▶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없음

▶ **자체조사 (언론보도 등)**

없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6개 시·도지사 후보자 동물복지정책 질의서

1. 공통질의

공통질의 1. 동물학대 예방 및 피학대동물 보호체계 강화

배경 및 현황: 동물학대 사건은 신고 접수, 현장 확인, 동물 격리, 응급진료, 임시보호, 수사 협조, 재입양까지 여러 단계가 끊이지 않아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소유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피학대동물이 원래 장소로 돌아가면 재학대 위험이 남고, 치료비와 보호비 부담 때문에 장기보호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동물보호관의 권한과 인력, 경찰·소방·수의사회·민간단체와의 공동대응 체계가 지역별로 달라 피해동물 보호 수준의 격차도 발생합니다. 피학대동물은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행동평가, 사회화, 안전한 입양 연계가 필요하므로 단순 격리를 넘어 회복 중심의 보호체계가 요구됩니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표준 매뉴얼, 긴급보호 예산, 전담인력, 협력기관 네트워크 마련 등 동물학대 예방 및 피학대동물 보호체계와 관련된 후보자님의 비전 및 정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책 예시

- 동물학대 신고 접수 후 현장출동, 격리, 응급진료, 임시보호, 재입양까지 이어지는 보호·관리체계 구축
- 동물보호관 증원, 전담 수의 인력, 경찰·검찰·소방·동물보호단체와의 공동대응 매뉴얼을 마련 등

공약 반영 여부: 반영 검토 미반영

세부 답변: 임기 내 목표, 조례·예산·전담부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공통질의 2. 유실·유기동물 발생 저감과 동물보호센터 복지 개선

배경 및 현황: 반려동물 등록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유실·유기동물의 예방, 구조, 보호, 입양은 모든 지방정부가 다뤄야 할 상시 과제가 되었습니다. 유실·유기동물 문제는 보호센터 수용 공간 부족, 질병관리, 행동문제, 장기체류, 안락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발생 저감 정책과 보호 품질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동물등록률 제고,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유기 예방 캠페인은 보호센터로 들어오는 동물 수를 줄이는 사전 정책입니다. 동시에 보호센터의 사육환경, 의료·방역, 입양상담, 임시보호, 정보공개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보호동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광역지자체는 시군구별 보호센터 격차를 줄이고, 민간위탁 시설까지 포함한 평가·지원·감독 체계를 설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실·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복지 개선을 위한 후보자님의 정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책 예시

-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동물등록률 제고, 실외사육견 중성화,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유기 예방 캠페인 강화
- 공공·민간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사육환경 개선 및 자연사율 저감 목표 제시 등

공약 반영 여부: 반영 검토 미반영

세부 답변: 임기 내 목표, 조례·예산·전담부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공통질의 3. 동물원·수족관 등 전시시설 내 동물복지 강화

배경 및 현황: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이후 동물원과 수족관은 단순 등록시설이 아니라 허가, 서식환경, 전문인력, 질병관리, 안전관리, 휴·폐원 시 동물관리계획까지 갖춰야 하는 시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시동물은 시설 내부에서 평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사육면적, 은신처, 수조·사육장 구조, 행동풍부화, 사회적 환경이 복지 수준을 결정합니다. 먹이주기·만지기·공연·사진촬영 등 체험형 프로그램은 관람객 흥미를 높일 수 있지만, 동물에게 반복적 스트레스와 부적절한 접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휴업·폐업하거나 재난이 발생하면 동물이 방치되거나 부적절하게 매각될 위험이 있어 광역 단위의 구조·이송·보호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는 허가와 점검 권한을 활용해 전수조사, 복지평가, 개선명령, 부적합 시설 전환을 추진할 핵심 주체입니다. 특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허가가 유예되었던 전시시설의 유예기간이 2028년 종료됨에 따라 부적절한 시설의 퇴출 및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책 예시:

- 관할 동물원·수족관·체험형 전시시설의 전수조사, 복지평가, 개선명령, 부적합 시설의 폐쇄 로드맵 수립
-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신규 도입 제한, 부적절한 먹이주기·만지기·공연 중단, 행동풍부화와 은신처·사육면적 확대를 포함한 전시동물 복지 기준 제시 및 제고 등

공약 반영 여부: 반영 검토 미반영

세부 답변: 임기 내 목표, 조례·예산·전담부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공통질의 4. 농장동물 복지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 전환

배경 및 현황: 농장동물 복지는 축산업의 생산방식, 농가 소득, 지역 환경, 공중보건, 가축방역, 소비자 신뢰와 직접 연결되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정책 영역입니다. 밀집사육, 산란계 케이지, 모돈 스톨, 열악한 환기·바닥 환경 등은 동물 고통뿐 아니라 질병 확산과 악취·분뇨 민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가가 복지형 사육으로 전환하려면 시설 개선비, 컨설팅, 판로, 공공급식·공공구매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폭염, 한파, 화재, 수해, 전염병 발생 시 농장동물은 대량폐사나 긴급 살처분 위험에 놓이므로 재난대응 매뉴얼과 예산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농장이 없거나 적어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소비를 통해 농장동물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출마하시는 지역에서의 농장동물 복지를 개선하고 어떻게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전환할지 정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책 예시:

- 산란계 케이지, 모돈 스톨, 밀집사육 등 주요 농장동물 복지 현안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개선 목표 제시
- 동물복지 인증 농가 전환 지원, 공공급식·공공구매 연계, 축산환경 개선 보조금의 복지 기준 반영
- 폭염·한파·화재·수해·전염병 발생 시 대량폐사와 생매몰을 줄이기 위한 농장동물 재난대응 매뉴얼과 예산 마련 등

공약 반영 여부: 반영 검토 미반영

세부 답변: 임기 내 목표, 조례·예산·전담부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공통질의 5. 동물복지 전담조직·예산·시민참여 거버넌스

배경 및 현황: 동물복지 정책은 반려동물, 유실·유기동물, 농장동물, 전시동물, 야생동물, 재난 대응, 시민교육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기 쉽습니다. 전담조직과 안정적인 예산이 없으면 단체장 공약이 일회성 행사나 민원 대응에 그치고, 보호센터 개선이나 학대대응 같은 구조적 과제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 시민참여형 평가, 전문가 자문, 민관협력 체계는 현장의 문제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시·도의 동물복지 정책에 있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 시·군·구의 동물복지 조직·예산·시민참여를 어떻게 강화해나갈 지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책 예시:

- 동물복지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 설치, 동물복지위원회 권한 강화, 시민·전문가·단체 참여 확대 등

공약 반영 여부: 반영 검토 미반영

세부 답변: 임기 내 목표, 조례·예산·전담부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2. 지역별 현안 질의

추가 질의1. 도심 길고양이 공존정책과 TNR의 질 관리 (서울)

배경 및 현황: 서울시는 2008년 TNR 사업을 확대 시행한 이후 그 추정 개체수가 감소 및 증성화율도 상승 등 길고양이 관리 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다고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서울은 여전히 주거밀도와 생활권 밀도가 높아 길고양이 돌봄, 급식소 운영, 배설물·소음 민원, 캣맘·주민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TNR은 개체수 관리와 갈등 완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포획, 수술, 회복, 방사, 사후 모니터링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그 효과와 동물복지가 모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재개발지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의 경우 사업 과정에서 서식지를 잃고 인근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새로운 민원을 야기하기도 하나 현행 제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급식 금지나 돌봄자 배제만으로는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고, 공공급식소 기준, 위생관리, 주민조정, 돌봄자 교육 등 결합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같은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별 예산과 집행 방식이 다르면 길고양이 보호 수준과 민원 대응의 편차가 커질 수 있어, 이에 서울시에서 광역 차원의 TNR 품질관리, 표준 급식소 모델, 주민갈등 조정체계,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하여 후보님의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책 예시:

-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가 단계에서 해당 구역 내 길고양이 군집 현황 조사, 집중 TNR 실시, 임시 이주처 확보 계획 마련,
- 길고양이 TNR의 포획·수술·회복·방사 기준 강화
-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주민조정·돌봄자 교육 등

공약 반영 여부: 반영 검토 미반영

세부 답변: 임기 내 목표, 조례·예산·전담부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2. 우치동물원 동물복지 우선 운영과 판다 유치 추진 관련 (전남광주)

배경 및 현황: 공통질의 3에서 제시한 전시시설 동물복지 강화 과제에 더하여, 광주는 공립 우치동물원을 직접 운영하는 지방정부로서 보다 구체적인 책임이 요구됩니다. 1992년 개장한 우치동물원은 89종 667마리의 동물이 생활하는 호남권 최대 공립 동물원으로, 2025년 국가 제2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공영시설인 만큼 민간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 복지평가 결과 공개, 시민 설명 책임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현재 자이언트판다 유치가 논의되는 가운데 사육시설 신축·개축에 약 350억 원, 동물원 전체 리모델링에 1,000억 원대의 예산 투입이 거론되고 있어, 기존 보유 동물의 사육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보다 새로운 동물 도입과 시설 확충이 앞서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판다 도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동물 도입과 시설 확충에 앞서 현재 우치동물원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의 사육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이 반드시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책 예시:

- 보유 동물 전수 복지평가 실시 및 노후 사육시설 개선 우선 추진
- 판다 대여 추진 시 동물복지 기준 충족 여부를 선결 조건으로 검토
- 관람·오락 중심에서 복지·교육·보전 중심으로의 운영 전환 로드맵 수립 등

공약 반영 여부: 반영 검토 미반영

세부 답변: 임기 내 목표, 조례·예산·전담부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3. 민속 소싸움 관련 동물복지 정책 질의 (경북, 경남, 충북)

배경 및 현황: 경북 청도군 / 경남 진주시·창원시·의령군·창녕군 / 충북 보은군에서는 민속 소싸움 행사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전통문화·관광·지역경제 논리와 동물복지 사이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사 운영에는 공공 예산, 관광정책, 지역경제 논리가 결합되어 있어 이를 단순한 민간행사로 볼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정책 판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예산이나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면 동물 고통, 부상, 은퇴 후 관리, 대체행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책 예시:

- 소싸움 행사·시설에 대한 공공 예산 지원 재검토 및 단계적 축소·중단 계획
- 소싸움을 대체할 비동물 이용 지역 문화행사 발굴 및 전환 지원
- 싸움소의 훈련·이동·경기·부상 단계별 복지 실태 조사 및 정보 공개

공약 반영 여부: 반영 검토 미반영

세부 답변: 임기 내 목표, 조례·예산·전담부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4. 산불 등 재난 시 반려동물·농장동물·야생동물 구조 대응 체계 마련 필요성 (강원, 경북)

배경 및 현황: 강원도는 특히 산림이 많아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주요 서식지이지만, 폭설과 폭우 등 기후 재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입니다. 또한 대형 산불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을 포함한 종합적 재난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 동반 대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동물을 현장에 남겨두거나 대피를 미루는 보호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장동물은 이동이 어렵고 화재·정전·급수 중단에 취약해 짧은 시간 안에 대량폐사로 이어지며, 농장주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긴급 사료·급수, 임시계류, 방역 연계 등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난시에 발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이동경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조·치료·방사 체계 등을 포함한 재난대응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원도에는 재난시 피해 동물 사전 대피·긴급 이송 계획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기후재난 대응 역시 단발성 구조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대형 재난에 대비한 동물 보호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및 현황: 경북은 산림과 농촌지역이 넓고 대형 산불 위험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을 포함한 종합적 재난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 동반 대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동물을 현장에 남겨두거나 대피를 미루는 보호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장동물의 경우, 이동이 어렵고 화재·정전·급수 중단에 취약해 짧은 시간 안에 대량폐사로 이어지며, 농장주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긴급 사료·급수, 임시계류, 방역 연계 등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2025년 3월 경북 초대형 산불로 인해 한우 281두, 돼지 2만 5,034두, 닭 17만 4,027수, 양봉 1만 3,740군의 가축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등 재난시에는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이동경로에도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바, 구조·치료·방사 체계 등을 포함 계획적인 재난대응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북도는 재난대피소 운영 기준, 동물구호 물자 비축, 구조기관 협력체계, 농장동물 긴급대응 매뉴얼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사후 수습보다 사전 계획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재난대응과 관련한 동물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책 예시:

- 재난 대피소 운영 기준에 반려동물 동반 대피 허용 기준 및 임시 계류 공간 마련 명시
-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농장동물·야생동물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신고·현황집계 체계 구축
- 피해동물 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및 화재·정전·급수 중단 시 긴급 사료·급수·임시계류 등 연계 체계 사전 구축
- 산불·수해 발생 시 야생동물 구조·치료·방사를 담당하는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사전 지정

공약 반영 여부: 반영 검토 미반영

세부 답변: 임기 내 목표, 조례·예산·전담부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3. 기타 동물복지 공약

그 밖에 후보자님의 동물복지 공약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